

## 7차시[학교안에서 서로 싸운 경우, 학교폭력이 아닌가?]

<학습목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기능과 구성 및 의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점 및 서로 싸운 경우 과실상계 문제 및 상계가 금지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G도가 설치·운영하는 K중학교에서 중3 남학생 A와 B, C가 2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싸웠다. 첫 번째 싸움은 1층 화장실에서 A와 B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 끝에 싸웠고, 이 과정에서 B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곧바로 다시 3층 화장실에 올라가서 A와 B의 친구인 C가 B의 친구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싸웠는데, A는 얼굴 부위와 치아 손상으로 전치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C도 다리와 팔 등에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싸움은 3학교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에게 발각되었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은 A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사건 당일 A의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B, C 및 싸움 현장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 진술을 받았다. A의 어머니가 B, C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을 안 B, C의 부모도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A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최종조사 결과, 2회 모두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조사되어 현재 A와 B, C 모두 상해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K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의 이미지 실추나 교육청으로부터의 조사나 문책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A의 어머니에게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만일 학교폭력으로 K중학교에 신고하더라도 이미 형사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A의 어머니는 고소취하조건으로 치료비 300만원, 향후 예상되는 코뼈 수술비 200만원, 치아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300만원 및 위자료로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B의 부모도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B도 치료비로 3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의 부모는 C가 전치 3주로 4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면서 B 및 C의 부모는 A가 요구하는 치료비 등 1,000만원에서 B의 치료비 300만원과 C의 치료비 400만원의 합계액인 700만원과의 차액인 3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K중학교장의 주장처럼 학교내에서 서로 싸워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한 형사고소된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서로 싸워서 서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하겠다는 B 및 C부모의 주장은 타당한가?

###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사건은 필수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학교 자치기구인 '선도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및 형사고소된 사건의 경우 가해생들에게 별도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고 치료비 차액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사건의 결말

3학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반드시 K중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을 심의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자는 K중학교장의 설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는 병과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된 사건이므로 가해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K중학교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서로 싸운 경우, 먼저 의도적으로 싸움을 유발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과실비율을 50% 대 50%로 볼 수 있다. B, C 부모가 자신들이 입은 손해, 즉 치료비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A부모에게 주겠다는 주장은 우리 법(판례)상 상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즉 위와 같은 쌍방 서로 싸움에서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A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 위 B, C가 A에게 그 차액인 300만원만 주겠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 전문가 의견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한다. 형벌과 징계벌은 '제재'라는 점에서 같으나, 학생 등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벌은 반사회적인 법익침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인데 반하여,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에서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는 병과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은 형사소추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 1. 상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동영상 강의

### 가. 상해죄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증언 등에 대한 보복등의 목적으로 상해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한 경우나 특수상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 나. 상해의 구체적인 예

신체상처(예 :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처녀막파열), 일부박리(예 : 치아 탈락), 성병전염(예 : 성병감염), 기능장애(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일시적이 아닌 인사불성) 등이 포함된다. 상해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형적방법(예 : 폭행)이나, 무형적방법(예 : 협박), 직접적·간접적,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 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규정이 있다. 형법제263조에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점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점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의 적용요건으로는 2인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며,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건 불문하며, 누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원인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 라.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

조 제1호).

마. 서로 싸우다가 다친 경우의 문제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학생이 더 많이 다치고, 다른 학생은 조금 덜 다친 경우라면 싸움을 한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된다.

## 2. 서로 싸운 경우 정당방위인가? - 동영상 강의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둔 이유

발달과정상에 있는 학생 청소년들의 사건을 형사, 민사적으로 확대시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 것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법집행과 교육적 해결 과정의 중간적 역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나. 선도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차이

- ① 선도위원회 :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학교자치기구이며 교원으로 구성되어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정기구이며 교원 외에도 학부모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은 필수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비행 건은 학교자치기구인 ‘선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였다면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징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징계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선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다.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

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4. 일사부재리 원칙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한다. 형벌과 징계벌은 '제재'라는 점에서 같으나, 학생 등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벌은 반사회적인 법익침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인데 반하여,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에서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는 병과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은 형사소추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5. 과실상계의 문제

가.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는 "민법 제396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나. 가해행위가 생명과 신체의 침해행위인 경우, 가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피해자가 반격을 가한 경우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즉 싸움으로 서로 때려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이 가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서 피해자의 반격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65.8.24. 선고 65다1096 판결).

다.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4539 판결).

## 6. 서로 싸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계의 금지

### 가.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492조, 493조). 예를 들어 A가 BDP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편, B는 A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전채구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의 B에 대한 채권과, B의 ADP 대한 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에는 A또는 B는 B또는 A에게 대등액인 1,000만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1,000만원의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B가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를 하는 측의 채권( B의 1,000만원 채권)을 자동채권이라하고, 상대방 A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 나. 상계의 요건

상계의 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계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3조는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 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즉 우리 민법과 판례는 쌍방 서로 싸움에서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 라. 중과실의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 )

#### 마. 상계계약

민법상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계약자유 원칙상 상계이 목적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계계약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R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인 상계예약도 유효하다.

### 7. 싸움의 경우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판결 주문의 형태

가. 위 사례에서 A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B도 반소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A는 원고이면서 반소피고가 되며, B는 피고이면서 반소원고가 된다. A가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으로 1,500만원을 청

구하고, B가 1,000만원(위자료포함)을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쌍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사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주문형태가 될 것이다.

#### 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2.부터 2011.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2.부터 2011.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70%는 피고(반소원고)가, 30%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정리하기

학교폭력 사건은 필수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비행 건은 학교 자치기구인 ‘선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였다면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징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징계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선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쌍방 서로 싸움에서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